

단속보단 기술지원과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에 역점

■ 편집부

* 李愚鐘 청장 *

'36년 충남 부여 출생
중앙대 경상대학 졸업
미국 남가주대학 행정대학원 수료
국방대학원 수료
前, 총무처 27년 근무
환경청 원주지청장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現, 환경처 광주지방환경청장

일시 : 1991년 2월 11일

장소 : 광주지방환경청 청장실

참석 : 이우종(광주지방환경청장)

허관(광주·전남협의회 직전회장)
김왕근(" 회장)
방극진(" 부회장)
송경선(전북협의회 회장)
배태열(" 총무)

허관회장 :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장님께선 부임이래 호남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광주천과 무등산, 지리산 등지에서의 자연정화활동과 캠페인 실시를 비롯, 사회단체나 주민등을 상대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 지역 환경보전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의 환경인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지방환경청의 금년도 주요시책 및 지도점검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덧붙여 환경보전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도

듣고 싶습니다.

이우종 청장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엔 환경오염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GNP 대 환경투자비율이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뒤집니다. 하지만 환경관련법령은 오히려 그들보다 앞선 면이 많지만요.

요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역시 증폭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행동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입니다. 욕구 수준은 2만불 수준이지만, 행동수준은 3천불 정도라고 할까요. 이처럼 모순이 상충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금년도 우리청의 시책을 설명하자면 우선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맑은 물 공급」이라는 과제아래 특정유해물질 발생시설의 신·증설허가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의 대단위 축산 시설과 가두리양식장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이 것의 입지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쪽으로는 지난해 30%나 증가한 이곳 자동차들의 공해단속, 저유황유 공급 및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악취나 비산분진 발생업소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고요.

지난해 여름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폐기물 분야에 있어서 업체에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폐기물 감량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타이어나 폐전전지 등의 관리도 강화, 에너지 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권역별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환경의 종합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지역별 환경모니터제 실시 등으로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광양, 순천, 군산연안 등 오염우심지역업소나 문제 및 상습위반업소에 상주 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시·도 및 검찰과 수시로 협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년엔 단속보다도 기술지원과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청에서는 업소별 혹은 오염원별로 자율적인 오염저감 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하고, 환경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색등급업소나 낸 2회이상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요인을 분석, 그 저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업소의 자가측정 내실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
우리 청에서는
업소별 혹은 오염원별로
자율적인 오염저감 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하고,
환경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색등급업소나 낸 2회이상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요인을 분석,
그 저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도 강화하려 합니다.

김왕근회장 : 기술지도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제시한 자문의 결과로 폐기물을 감량화에 좋은 성과를 거둔 업체의 소식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무적인 현상이지요.

하지만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약품을 더 사달라던가 혹은 시설을 증설하자고 품의를 돌렸을 때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해 고발당했을 경우 현행 환경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벌규정으로 관리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사실이고요. 물론 타 법령에도 양벌규정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적인 책임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관한 이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우종청장 : 지적하신 것처럼 이 양벌규정은 타 행정법령에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 중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이나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은 행위자의 성실한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책임자의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피고용인의 철저한 관리의무측면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송경선회장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2~3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만, 평상시 환경업무로 이곳에 들르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환경청의 설립을 바라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서해안개발의 일환인 군장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업무도 폭증하리라 전망되는데, 전북지역에 지방환경청의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이우종청장 : 현재 지방환경청의 조직특성은 환경오염의 영향권별 광역관리 체제입니다.

지방환경행정의 수요와 주민의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북지역의 지방청 설립문제가 차후 거론되겠지만, 정부의 간소한 조직 원칙과 지자체 실시이후의 시·도행정 문제 등이 있기 때-

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줄 압니다.

배태열총무 : 만약 지방청의 시설이 어렵다면 기존 전주환경출장소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인·허가는 어렵더라도 신고처리나 완료검사 등의 업무를 이관 한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이우종청장 : 현재 전북지역의 지도단속은 15명의 전주환경출장소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출장소에서는 환경처 고시 90-1호, 즉 환경출장소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허가 및 측정업무는 관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 위임전결이 가능한 범위를 다각적으로 검토, 본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송경선회장 : 아시다시피 이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각 배출업소에서 배출·유입시키고 있는 폐수 중에서 BOD, COD, SS 등 일반항목만을 처리하고 있을 뿐 다른 항목들은 각 사업장에서 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알카리, 핵산, 중금속은 업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만 갖추더라도 몇 억원이 투자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저희 생각엔 이리지역은 섬유공장이 많아 핵산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종말처리장에서 기존의 시설을 증설하여 핵산처리를 해준다면 약품절약은 물론 업소의 이중투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산·알카리처리는 관로부식문제로 어렵다치더라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와 관련시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업소에 대한 관리인 선임문제 역시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우종청장 :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송회장님의 말씀하신 이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폐수종의 BOD나 COD 등 일반항목의 적정처리시설만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밖에 노르밀핵산 및 비소, 구리, 카드뮴 등의 특정유해물질 등은 각 해당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적정처리한 후 배출하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 항목외에 악성폐수도 처리하려면 기존의 시설로는 불가능할 뿐 더러 이것은 정책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각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합니다.

또 관리인 선임완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인의 주요업무인만큼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이중투자가 배제되도록 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태열총무 : 이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는 전제아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전북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유난히 지도점검 회수가 잦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고발건수도 많아 관리인이나 기업이 위축되는 경향인데 이에 대한 배려는 없으십니까?

이우종청장 : 저 역시 부임초에 ‘왜 전남보다 전북 지역에 지도단속이 많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각 지방환경청별로 등급 및 종별에 따라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청의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실은 없어요.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 관할업소 수는 총 8백 34개로 이중 광주·전남에 4백 68개, 전북에 3백 23개 그리고 제주에 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를 업소의 점검회수를 보더라도 광주·전남이 2천9백49회, 전북 2천67회, 제주 2백 10회로 대동소이 합니다. 처분실적도 각각 1백 78, 71, 30건으로 나타났고 총 1백업소에 내린 배출부과금 역시 44, 37, 19업소로 구분되므로 전북지역에 지도점검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지도단속이 밀거름이 돼 기업들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전북지역에서는 요즘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잘하자는 블도 일고 있고요.



▲이우종청장

영향권별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각기관 단체의 역할을 분담 조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환경청의
고유기능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허관회장



▲김왕근회장



▲방극진부회장

우리청에서는 특별전문기술단을 구성해 기업에게 노하우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허관회장 : 일선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꼭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우리 호남지역은 산업폐기물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은 업체가 많습니다. 폐기물 매립지 확보와 폐기물처리업체 육성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배태열총무 : 그 문제에 대해선 저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단 가가 2배나 인상됐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2개의 처리업소가 있는데 비해 전남엔 한곳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관리인들 간에는 전북지역내의 자체발생량처리도 어려운데, 전남지역의 폐기물까지 전북에서 소화해야하나는 지적도 많은데요, 전북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실태 및 처리업소 신규허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우종청장 : 정말 폐기물 문제는 매립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실시

되면 더욱 반대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295.4천톤의 산업폐기물이 처리됐으며, 44.5천톤이 보관중에 있죠.

폐기물 처리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생산단가를 줄이는 것과도 직결되니만큼, 앞으로 법령범위 내에서 많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를 허가 육성코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며, 청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김왕근회장 : 자차자찬 같지만 서울에 있는 연합회를 정점으로 전국의 협의회별로 지역나름의 특징을 살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보완할 점도 많겠지만요.

평소 저희들 활동사항에 대해 느끼신 점에 있으시다면 이런 자리를 빌려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우종청장 : 그동안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을 접하면서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관련해 본부나 지방청에서는 환경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연합회 및 협의회에서 각종 간담회나 캠페인에 동참함은 물론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



▲송경선회장



▲배태열총무

기반구축에 일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거시적안목으로 더 좋은 오염저감대책을 서로 연구 노력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방극진부회장 : 이청장님, 환경보전캠페인에는 환경관리인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 일반공무원이나 다른 단체들의 참여 유도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우종청장 : 현재 주민동원을 통한 자연보호업무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우리청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환경관련업체의 종사자와의 공동추진이 불가피하지요.

지난해 청에서 주관, 실시한 캠페인은 총 54회로 여기에는 민·군·관·각종 사회단체의 14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방극진부회장 : 앞으로 실시될 지자체에 대비해 환경청 업무와 시·도 업무를 균형있게 운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우종청장 : 지자체가 실시되면 환경청과 시·도는 동반자로서 공동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환경청의 주요업무는 권역환경보전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과 오염원의 지도단속에 있

습니다.

따라서 영향권별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조정기능 수행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각기관 단체의 역할을 분담 조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환경청의 고유기능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지도점검을 위한 관할 업소의 관장은 법적으로 구분돼 있으니까 시·도와 협동,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을 강화해 합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허관회장 : 이청장님, 오랜시간 동안 저희들이 알고싶었던 현안 문제 등 향후 협의회 활동에 지침이 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활동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우종회장 : 여러분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도 애 향심이 강하고 자부심도 큽니다. 이에따라 환경보전운동도 애 향운동에 접목시켜 정착화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애 향심차원에서 활발한 환경보전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청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